

내일신문·문화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중간평가' ①

“정부의 ‘문화융성’ 어디로 갔나”

우수도서 선정사업 ‘예술인 반발’... 전문성 없는 기관장 인사로 ‘논란’

- 글 쓰는 순서**
- 1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은 어디로 갔나
 - 2 예술의 위기, 예술 전문기관의 몰락
 - 3 창조 없는 창조경제, 언제까지 한류만
 - 4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문화복지
 - 5 문화정책은 국가 아닌 행복한 삶 위한 것

박근혜정부는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를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공약에서 ‘문화재정 2%'를 내세우고 문화융성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를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공약에서 ‘문화재정 2%'를 내세우고 문화융성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를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공약에서 ‘문화재정 2%'를 내세우고 문화융성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는 GDP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문화부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를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이라는 2가지 개념으로 구체화시켰다. 문화부는 ‘문화의 융성’에 대해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문화를 통한 융성’에 대해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2013년 5월 개최된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지표는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한국 사회·경제개발 단계에 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에 ‘자기검열’ =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범 만 2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이 국정기조를 실현해 왔는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융성’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라는 것이 무색하게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논란이 계속됐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이르러 ‘세종도서 선정사업 (우수도서 선정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사



윤진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교체 이후 언론을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2013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오스 참파서 유적 보존복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의 박 대통령과 유 전 장관. 사진 연합뉴스

태’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 우려할 만한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세종도서 선정사업이란, 우수도서를 선정해 도서관 등에 배포,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142억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학 분야 심사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인들과 출판계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란 1월 부산시가 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사퇴 압박을 가한 사건을 일컫는다. 영화계는 이를 두고 부산국제영화제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영화화한 ‘다 이빌벨’을 상영했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술가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기 검열’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없는 인사로 ‘행정 파행’ = 현 정부 들어 유독 문화부와 산하기관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문화부는 수장인 장관에 대한 인사 논란이 계속됐다.

윤진홍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와의 갈등 끝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임 후에는 문화부의 체육국·과장이 대통령 지시로 경질됐다는 인터뷰를 하며 논란을 낳았다. 유 전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SBS 앵커 출신 정성근씨는 청문회 탄핵 소동에도 불구하고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기본법은 본래 제안 배경인 ‘국민의 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국가의 문화사업을 넘어 국정 운용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가치의 확산’ 등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이 소장은 “문화부는 전문기관인 산하기관들을 하청업체처럼 다루 전 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정 기자 funnyson@naeil.com

기고

문화기본법 등 문화 3대 법안 시행, 그 미래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중간평가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할 지점 중에 하나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 시행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이자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문화분야 3대 법안이 박근혜정부 집권 초기에 모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문화분야 3대 법안을 시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분야 3대 법안의 제정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후속 추진절차 등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쉽게 ‘공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문체부만의 법’이 된 문화기본법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기본법은 본래 제안 배경인 ‘국민의 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국가의 문화사업을 넘어 국정 운용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가치의 확산’ 등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이 소장은 “문화부는 전문기관인 산하기관들을 하청업체처럼 다루 전 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은 실종된 채 문체부 내부의 자체적인 사업평가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자율 침해 지역문화진흥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위한 장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성 원리와 철학 자체가 ‘자율적인 지역문화의 자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국권력’에 의한 지역문화의 관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8의 ⑤)라는 조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정부,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집권적 철학과 구조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많은 지역문화정책 전문가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전반에 걸쳐 지역문화, 지방자치, 지역분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부족”하며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늦게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된 문화다양성법의 경우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문화다양성법은 제1조에서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지난 시간들은 국가권력을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재벌 중심의 문화산업 등

과점 심화, 다양성영화 지원정책 폐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태 처럼)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대한 ‘갑질’ 행적, 기획재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전문기관 통제합 추진 등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토대 자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공감해야

문화분야 3대 법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개별 법률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 과정에 있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 모든 법안의 제정 과정이 사회 전반은 물론 문화예술 생태계에서조차 충분히 설명되고 토론했지 못한 채 “쉬쉬”하며 통과되었다.

문화분야 3대 법안의 사회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국민과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교감 및 합의보다 공약 사업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중요하게 여긴 문화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은 행정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문화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다. 박근혜정부는 문화분야 3대 법안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생략한 것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수다회: 박근혜정부 문화정책을 말하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자

정책, 현장의견 반영 안 해 문체부, 더 적극적이어야

내일신문과 문화연대는 공동기획을 위해 8일 오후 ‘수다회: 박근혜정부 문화정책을 말하다’라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기획기사의 방향과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행정의 파행’ ‘방향성 없는 예술정책’ ‘넥스트(NEXT)가 없는 문화산업’ 등 다양한 주제를 꼬집으면 수다회 자리는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소연 연극평론가,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이 함께 했습니다. (이하 직함 생략)

김소연 = 박근혜정부 들어 ‘문화융성’이라는 4글자 빼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이 없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말고는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계속된다. 반면 인사 사고 등 온갖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제안을 받았을 때 ‘독자들과 나눌 얘기가 있을까’ 싶었다.

70년대 ‘국가주의’ 흐름 재현 원해 이원재 = 그렇다고 그냥 두면 정책을 방치할 수 있다. 의미 부여를 하자면

박근혜정부는, 최초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이라며 문화를 언급했다. 집권 이후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3대 법안이 통과됐다. 김소연 = 문화예술계 숙원 사업이었던 3대 법안의 경우, 통과는 됐지만 작동은 안 되고 있다.

염신규 =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집단들도 단일하지는 않다. 관료들은 법안을 하나라도 밀어붙여서 자기 성과로 가져가려 한다. 그 결과가 3대 법안 통과다.

경제 논리로 ‘산하기관 통합’ 계속 염신규 = 인지도 문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임명된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정성근씨. 대통령이 이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다. 생각이 다른 집단을 정책해 참여시키는 ‘포괄적 개방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원재 = 인사 파행의 배경에는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 존재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있는 법인데 문체부는 전문기관인 산하기관을 하청업체 취급한다.

최현용 = 이런 측면도 있다. 문체부는 산하기관을 두고 현장과 만나는데 비전문적인 기관장으로 인해 산하기관의 활동은 무력화되는 추세다. 문체부로서 산하기관은 ‘애기할 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그 외 제3의 전문가를 따로 관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김소연 = 법제도는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데, 경제·사회·기술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찰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인식이 10년 넘게 그대로다.

염신규 = 법제도가 촘촘하게 있는 상태에서도 현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제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다. 지금도 문체부의 부재는 법제도를 작동하지 못 하게 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이원재 = 산하기관 통합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계속되고 있다. 산하기관들은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문체부의 도구가 된다.

김소연 = 통합하면서 하는 말은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다. ‘어떤 시너지냐고 물으면 ‘비유적’만 얘기한다. 각 기관들의 필요성이나 설립 이유, 목적 등은 사라진다.

염신규 = 문체부 관료들은 기획재정부가 돈 안 준다. 행정자치부가 조직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만발 한다.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데도 정면 돌파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

김소연 =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한번 없다.

염신규 = 예술정책은 관료들끼리 만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 등 민간 영역이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은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무력해져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다.



내일신문과 문화연대는 공동기획을 위해 8일 오후 ‘수다회: 박근혜정부 문화정책을 말하다’라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연 연극평론가,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사진 이원재

할 주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래 창조과학부, 문체부는 각 소관기관들을 ‘챙겨주기’ 바쁘다.

이원재 = 문화산업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도 연관된다.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해도 산업에 일자리가 없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없다.

문체부는 예술강사제도에서 확인됐 질 낮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다. 최현용 = 최근 ‘어디까지나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나’ 즉, ‘예술 노동’이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이 창작자 집단의 수익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원재 = 문화예술 분야는 산업과 과정에서 임금노동화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예술노동에 대한 착취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소연 = 문화예술 분야는 산업과 과정에서 임금노동화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예술노동에 대한 착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염신규 = 이제 ‘순수예술·기초예술 vs 문화산업’이라는 이분법이 변화

해야 한다. 예컨대 미술의 경우 굉장한 창조과학부, 문체부는 각 소관기관들을 ‘챙겨주기’ 바쁘다.

‘문화복지’ 개념. ‘창작’과 연결돼야 김소연 = 예술정책의 경우,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변화밖에 없다. 방향성이 드러나는 정책이 없다.

이원재 = 예술정책이 실종됐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 시작됐던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공급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소연 = 문화예술 분야는 산업과 과정에서 임금노동화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예술노동에 대한 착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염신규 = 문화복지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별적이다. 문체부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시도돼야 한다. 문화비우체 사업의 경우, 도입 초기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하는 흠뻑이지가 다운되는 등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것도 문제다.

김소연 =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에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문화가 있는 날’을 보면 소비자에 대한 지원만 하면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화복지’ 개념은 창작과 연결돼야 한다. 아까 말했듯 공적 영역 바깥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지원 정책이 갖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염신규 = 예술인복지의 경우 법이 통과됐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술(인)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정책만 추진되는 느낌이다.

정리 송현정 기자 funnyson@naeil.com